

한선 프리미엄 리포트

Hansun Premium Report

주 제 : 번영의 길: 경제민주화에서 경제자유화로
발제자 : 민경국 강원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일 시 : 2017년 03월 09일(목) 오전 7시 30분
장 소 :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2,000원으로 내 마음같은 '정책후원' 하기

☒ 문자 한 통 #7079-4545

제246회 정책세미나 주요 내용

< 요약 >

☞ 3월 9일 정책세미나에서는 민경국 강원대 명예교수를 연사로 '번영의 길: 경제민주화에서 경제자유화로'를 주제로 논의했습니다.

■ 오늘날 한국은 심각한 경제문제를 겪고 있다. 경제성장률이 1990년대 7%에 이르렀지만 2000년대에 5%로 떨어졌다. 2015년부터는 2%로 추락하기 시작했다. 10년째 국민소득이 2만 달러 대에 정체되어 있다. 실업과 빈곤층 문제 심화로 사회적 갈등의 골도 깊어지고 있다. 경제민주화로 이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 경제민주화는 강자를 규제하고 약자를 보호·지원하는 체계를 수립하고, 분배의 평등을 추구한다. 대기업, 대주주, 재벌은 규제대상이며 중소기업, 소액주주, 노동자 등은 보호·지원 대상으로 간주한다. △재벌개혁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근절 △대형백화점 영업시간 규제 △대주주 경영권 견제 △골목상권 보호 △노동자 경영 참여 △중소기업자·영업자 이익보호와 가게 부채경감이 경제민주화 정책의 대표적이다.

■ 시장경제를 바라보는 관점은 두 가지 전통으로 나뉜다. 애덤 스미스 전통은 "시장경제는 본질적으로 자율규제체계(Self-regulation System)를 가지고 있으며 사회이익을 추구한다."고 말한다. 국가의 개입은 고로 불필요하다. 반대로 토마스 홉스 전통은 "국가가 개입해야 사회이익이 보장되며 시장에 완전한 자율을 보장해선 안 된다."고 주장한다. 경제자유화가 애덤 스미스 전통을 기반으로 한다면, 경제민주화는 토마스 홉스 전통을 따른다. 시장이란 거대한

비언어적 소통체계다. 소비자로부터 선택받고자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가격이 형성된다. 가격은 곧 상호 간 소통수단이며 새로운 정보를 낳는다. 새로운 정보를 기반으로 또 다른 경쟁이 일어나며 시장은 다시 자율규제 능력을 발휘하게 된다.

■ 경제민주화는 “시장이 구조적으로 악(惡)하다.”고 말한다. ‘한 사람의 이익은 타인의 손해라는 제로섬 게임이기 때문에 국가가 시장을 규제해야만 강자가 약자를 착취하는 구조를 보완할 수 있다.’는 시장경제관을 전제로 한다. 시장경제의 자율규제 능력을 부정하는 관점이 경제민주화의 첫 번째 치명적 오류다. 최근 대기업과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시행된 하도급법, 순환출자 금지법, 백화점 영업시간 규제 등이 경제민주화 정책의 예다. 대기업에 대한 적대감은 사라져야 한다. 세계시장에서 치열한 경쟁 끝에 살아남은 대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위축시켜서는 안 된다. 기업이 정신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어야만 경제가 다시 활력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 정부는 순환출자 지배구조, 금산분리, 유통산업 구조 등 시장결과를 법으로 통제하려 한다. 경제민주화는 정부가 시장보다 더 현명한 판단을 한다고 믿는다. 하지만 정부가 모든 경제주체들의 행동을 통제할 수 없다. 시장에서는 수많은 상호작용이 일어난다. 그 결과를 정부가 예측하는 데에는 분명 한계가 있다. 정부가 성공적으로 시장에 간섭할 수 없다면 경제적 자유를 존중하고 시장 자율규제 능력에 의존하는 것이 더 현명한 대안이 될 수 있다. 최근 가격규제 정책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관료에 의해 책정된 가격은 시장 현장의 실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 경제주체를 이끌어주는 가격의 역할을 믿고 일정 부분 시장의 자율규제 능력에 더 의존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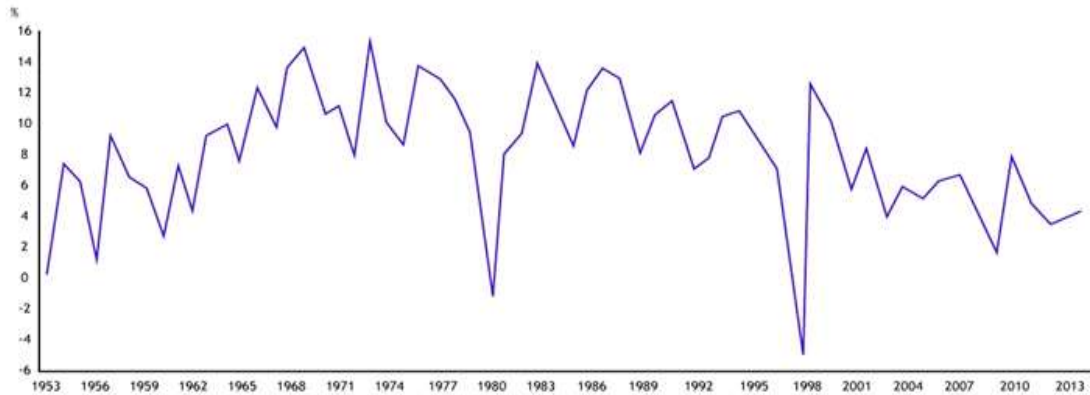
■ 시장경제는 부유층의 특권을 보호해주지 않는다. 경제적·사회적 불평등은 정경유착과 정실주의로부터 야기된다. 경제적 자유를 반대하고 경제민주화의 길을 걷는 것은 경제적·사회적 번영을 낳지 못 한다. 정치적 자유를 지향하는 민주주의도 경제적 자유의 토양이 될 수 있다. 다만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간의 가치 충돌이 일어날 경우를 염두에 두도록 해야 한다. 정부는 경제적 자유를 보장하는 법을 집행할 수 있는 공권력을 발휘해야 한다. 하지만 소년소녀가장, 무의탁 노인 등의 빈곤계층은 국가의 보호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한국 경제가 번영의 길을 걷기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두 가지로 정리된다. 하나는 법치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경제적 자유를 보장하는 법을 제정해야 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의회의 입법권을 제한한 다음 규제개혁을 이루어야 하는 것이다.

■ 경제민주화란 무엇인가

: 강자 규제 · 약자 보호를 보호하고, 분배의 평등 추구

- 오늘날 한국은 심각한 경제문제를 겪고 있다. 경제성장률이 1990년대 7%에 이르렀지만 2000년대에 5%로 떨어졌다. 2015년부터는 2%로 추락하기 시작했다. 10년째 국민소득이 2만 달러 대에 정체되어 있다. 실업과 빈곤층 문제 심화로 사회적 갈등의 골도 깊어지고 있다. 경제민주화로 이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 경제민주화는 경제적 자유를 제한하기에 기업이 정신이 발휘되기 힘들며, 시장 도덕적 가치도 일부 훼손된다. 이어 투자가 위축되고 경제가 활력을 잃을 수 있다. 경제 번영을 위해 경제자유화가 추진되어야 한다. 번영의 원리를 내재한 경제자유화는 고용, 성장, 빈곤, 양극화 문

제를 해결하고 사회평화를 증진할 수 있다.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국민계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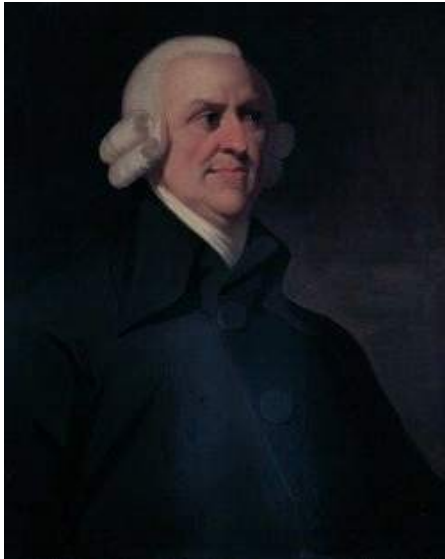
[그림 1] 한국 경제성장률 변화추이 (1953-2013년)

- 경제민주화라는 개념은 20세기 초 독일에서 처음 등장하였다. 사회주의와 민주주의 이념 결합의 산물이다. 국가의 경제계획을 국민이 직접 혹은 대의기구를 통해 결정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경제민주화는 유럽정치권에서 일찍이 소멸되었다. 한국에서는 1986년 ‘민주화의 봄’ 시기에 도입되었고, 2012년 경제민주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되었지만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경제민주화는 강자를 규제하고 약자를 보호·지원하는 체계를 수립하고, 분배의 평등을 추구한다. 대기업, 대주주, 재벌은 규제대상이며 중소기업, 소액주주, 노동자 등은 보호·지원 대상으로 간주한다. △재벌개혁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근절 △대형백화점 영업시간 규제 △대주주 경영권 견제 △골목상권 보호 △노동자 경영 참여 △중소기업자·영업자 이익보호와 가게 부채경감이 경제민주화 정책의 대표적 예다.

■ 시장경제가 가진 자율규제 능력의 힘

: 소비자의 선택이 기업의 성패를 결정짓는다

- 시장경제를 바라보는 관점은 두 가지 전통으로 나뉜다. 애덤 스미스 전통은 “시장경제는 본질적으로 자율규제체계(Self-regulation System)를 가지고 있으며 사회이익을 추구한다.”고 말한다. 국가의 개입은 고로 불필요하다. 반대로 토마스 홉스 전통은 “국가가 개입해야 사회이익이 보장되며 시장에 완전한 자율을 보장해선 안 된다.”고 주장한다. 경제자유화가 애덤 스미스 전통을 기반으로 한다면, 경제민주화는 토마스 홉스 전통을 따른다.
- 시장은 유기적인 자율규제 능력을 갖추었다.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 칸트의 ‘감춰진 손’, 하이에크의 ‘자생적 질서’는 모두 시장이 ‘스스로 조작되는 복잡계(Self-organizing Complex System)’임을 나타낸다. 시장에서 개개인이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사회적 관계를 맺는 과정이 곧 사회이익을 낳는다. 사회이익을 해치는 경제주체는 가차 없이 시장에서 도태되며 사회이익을 도모하는 주체는 바로 보상을 받는다. 품질이 좋지



[그림 2] 경제자유화의 애덤 스미스 [그림 3] 경제민주화의 토마스 홉스

많은 상품을 높은 가격에 판매하는 기업은 소비자의 선택을 받지 못해 실패한다. 소비자 욕구에 맞추어 좋은 상품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기업은 번창한다. 시장에서 소비자 선택은 기업의 성패를 결정짓는다.

- 시장이란 거대한 비언어적 소통체계다. 소비자로부터 선택받고자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가격이 형성된다. 가격은 곧 상호 간 소통수단이며 새로운 정보를 낳는다. 새로운 정보를 기반으로 또 다른 경쟁이 일어나며 시장은 다시 자율규제 능력을 발휘하게 된다.

■ 경제민주화 시장경제관의 오류

: 반(反)시장정서가 낳은 경제민주화 논리의 한계

- 경제민주화는 “시장이 구조적으로 악(惡)하다.”고 말한다. ‘한 사람의 이익은 타인의 손해라는 제로섬 게임이기 때문에 국가가 시장을 규제해야만 강자가 약자를 착취하는 구조를 보완할 수 있다.’는 시장경제관을 전제로 한다. 시장경제의 자율규제 능력을 부정하는 관점이 경제민주화의 첫 번째 치명적 오류다. 최근 대기업과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시행된 하도급법, 순환출자 금지법, 백화점 영업시간 규제 등이 경제민주화 정책의 예다. 하도급법은 납품업체를 대기업의 ‘약탈’로부터 보호하겠다는 취지에서 시행되었다. 하지만 실제 2002~2011년 대기업 매출액은 2.78배 증가하였고 협력업체는 3.08배로 증가하였다. 하도급시장에서 책정되는 가격구조는 경제주체 간의 자발적 합의에 의해 형성된다는 사실을 배제한 법이다. 골목상권 보호를 명목으로 대형백화점의 영업방식을 규제하는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다. 쾌적한 구매환경, 편리한 결제와 주차 시스템, 다양한 문화시설을 갖춘 대형백화점은 소비자 구매 선호의 결과물이다. 그런데도 이를 규제하는 것은 단순히 백화점의 판매액만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농어민 백화점납품 감소와 고용까지 감소시킨다. 골목상권 보호 및 활성화라는 취지에 부합하는지도 의문이 든다.

대기업에 대한 적대감은 사라져야 한다. 세계시장에서 치열한 경쟁 끝에 살아남은 대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위축시켜서는 안 된다. 기업이 정신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어야만 경제가 다시 활력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림 4] 지나친 정부개입으로 시장은 활력을 잃는다.

- 경제민주화는 반(反)시장정서를 기반으로 경제주체 간의 연대감과 유대감을 형성하고자 한다. 허나 시장은 고유의 도덕적 가치를 지닌다. 경제주체가 합의를 보고 사회적 관계를 형성해야 시장거래가 이루어진다. 예의범절, 인격·소유존중, 직업윤리와 약속이행 등의 행동규칙을 어긴 경제주체는 시장의 자율규제 능력에 의해 도태된다. 강자는 규제하고 약자는 보호·지원하는 경제민주화법은 법이 충족해야 할 조건 두 가지를 위반한다. 경제민주화법은 분배와 평등 실현을 목표로 기업과 개인을 수단으로 삼는다. 특정 정치적 목표를 삼는 것은 법의 탈목적성 원칙에 어긋나며, 특정 대상을 우대하거나 박해하는 것은 법의 보편성 원칙에 어긋난다. 시장자율 규제가 낳은 소득 분배가 불의인지 아니면 정부개입이 낳은 소득재분배가 불의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오히려 개인 존엄성과 기업이 정신이 상실되어 경제가 활력을 잃을 수도 있다. 법의 정치화는 사법주체인 국민의 자유와 재산을 유린하는 결과를 낳는다.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해주는 틀을 제공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법의 역할이다.
- 정부는 순환출자 지배구조, 금산분리, 유통산업 구조 등 시장결과를 법으로 통제하려 한다. 경제민주화는 정부가 시장보다 더 현명한 판단을 한다고 믿는다. 하지만 정부가 모든 경제주체들의 행동을 통제할 수 없다. 시장에서는 수많은 상호작용이 일어난다. 그 결과를 정부가 예측하는 데에는 분명 한계가 있다. 정부가 성공적으로 시장에 간섭할 수 없다

면 경제적 자유를 존중하고 시장 자율규제 능력에 의존하는 것이 더 현명한 대안이 될 수 있다. 사회주의 계획경제가 실패한 이유 중 하나가 지식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계획을 세우는 데에는 대상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허나 전국 곳곳에 분산된 정보를 집결할 방법을 고안해내지 못했다. 통계조사로 수치화할 수 없는 초(超)의식적인 정보들도 존재한다. 시장의 강점은 거대한 정보소통 체계인 가격구조를 형성한다는 것이다. 가격구조는 비언어적 소통체계다. 수천만 명이 가격을 통해 초의식적인 정보들도 교류하고 있다. 대기업의 스마트폰 한 대 가격에 각국 사람들의 생각, 의식과 지식이 담겨있다. 최근 가격규제 정책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관료에 의해 책정된 가격은 시장 현장의 실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 경제주체를 이끌어주는 가격의 역할을 믿고 일정 부분 시장의 자율규제 능력에 더 의존할 필요가 있다.

■ 경제자유화를 이루기 위한 정부의 과제

: 시장의 자율규제 능력에 대한 신뢰 필요

- 기업가 정신은 경제발전의 원동력이다. 경제적 자유가 보장된 환경에서 기업가 정신이 활력을 얻어 경제적 번영을 낳는다. 시장은 시대적 변화에 빠르게 적응한다. 경제적 자유 때문에 빈부격차가 심화되거나 특정 주체가 독점 이윤을 향유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자율규제 능력으로 품질 좋은 상품의 가격이 조정되고 소비자 행동양식을 평준화한다. 저소득층도 품질 좋은 상품을 향유할 수 있는 가격으로 조정되기도 한다.
- 시장경제는 부유층의 특권을 보호해주지 않는다. 경제적·사회적 불평등은 정경유착과 정실주의로부터 야기된다. 경제적 자유를 반대하고 경제민주화의 길을 걷는 것은 경제적·사회적 번영을 낳지 못 한다. 정치적 자유를 지향하는 민주주의도 경제적 자유의 토양이 될 수 있다. 다만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간의 가치 충돌이 일어날 경우를 염두에 두도록 해야 한다.
- 정부는 경제적 자유를 보장하는 법을 집행할 수 있는 공권력을 발휘해야 한다. 보편성, 탈목적성, 금지성 원칙을 지킨 법을 집행할 때 공권력이 도덕적 정당성을 갖는다. 보편적 빈곤 문제는 완전히 해결될 수 없다. 하지만 소년소녀 가장, 무의탁 노인 등의 빈곤 계층은 국가의 보호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한국 경제가 번영의 길을 걷기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두 가지로 정리된다. 하나는 법치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경제적 자유를 보장하는 법을 제정해야 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의회의 입법권을 제한한 다음 규제개혁을 이루어야 하는 것이다.

246회 정책세미나 질의응답

질문1 정경유착은 왜 발생하는가? 개선될 수 있을까?

답변 정부 개입이 완화되어야 한다. 규제가 심할수록 기업은 생명력을 잃는다. 공권력이 경제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부정부패를 척결하려면 우선 시장 자율규제 능력을 믿고 경제적 자유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

질문2 도덕적 가치와 윤리의식이 이미 무너져버린 경제 환경에서 어떻게 시장 자율화를 정립할 수 있을까?

답변 도덕적 가치와 윤리의식은 서서히 성숙해진다. 도덕적 가치와 윤리의식이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 중에 정부가 개입해버리면 그 과정은 수포로 돌아간다. 개인과 기업의 이기심을 경제적·사회적 악(惡)으로 간주되어선 안 된다. 이미 그들은 암묵적인 규칙들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다. 시장경제 체제에서는 경제주체가 경제활동에 열심히 참여한 것에 대한 보상을 주어야 한다.

※ 이 자료가 도움 되셨다면 수신번호 #7079-4545로 한 통 꼭~ 한선을 지지해주세요.

(한 통 2,000원)